

허위 농어촌민박 사업자 형사처벌

김종희 의원, 국감 후속조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농가소득 증대 제도 허점 악용 도시 투기민들 처벌해야

농어촌 민박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희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

거조항을 마련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신고만 하면 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숙박·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



는 것으로 농어촌 농가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2002년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4월 농림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어촌 민박의 26.6%(5,770호)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연면적 초과 위반 건수가

34.8%(2,009건)로 가장 많았다.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규모이어야 하나,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 후 증축하여 운영하다 적발된 것이다.

또한, 농어촌 민박 사업을 위해 민박 소재지에 전입 후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하고, 다시 전출하여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민박을 운영하는 실거주 위반이 24.5%(1,416건)로 많았다. 미신고 숙박영업 21.6%(1,249건), 무단 용도변경은 19%(1,096건)이었다.

그러나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조치한 내역을 보면,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를 요구한 245건 중 150건만 처리가 되었다.

위반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경남의 경우 사업정지 72건, 사업장 폐쇄 22건 중 실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사업정지 3건, 사업장 폐쇄 1건에 불과했다.

김종희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농어촌민박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일부 도시민들이 농어촌민박 사업을 투기 대상으로 삼아 집단화, 대형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 민박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행정당국에 적발되더라도 현행법상 거짓 신고사황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농어촌 민박 허위 신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교사·자녀 같은학교 배정 NO

도의회 김희수 의원, '도내에서도 '상피제' 도입 시행해야 도입시 시험성적·출제 관리에 부정 개입 소지 없도록 개선'



서울 강남의 유명 A사립고 내신 문제 유출 사건으로 공교육 불신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김희수(교육위원회·전주)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교에서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도내 12개 시·군 27개교에 65명(2018.8월말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립고는 8곳에 13명, 사립고는 27곳에 50명이었다. 국립 2곳에 2명도 포함됐다. 국공립 전체를 살펴보면 37곳에 교사는 65명, 학생은 67명이

다. 이와 관련, 최근 전국적으로 '상피제' 도입에 찬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 우려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활권을 옮겨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상피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피제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반발입장을 내놓은 것.

김희수 의원은 "교사 상피제를 시행하면, 시험성적 관리나 출제 관리에 부정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이라며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상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미투입법, 정기국회서 마무리"

당정, 근절 협의서 의견 모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6일 정기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미투(#Me too) 관련 입법을 마무리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대표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당정협의를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성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제도 준비를 미룰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미투입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정이 오늘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필요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태연 정책위 의장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신원 특정이 가능한 불법 촬영물 유통자는 벌금형 대신 징역형 처벌)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개정안(불법 촬영물로 인한 수익 몰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삭제 의무 부여, 수사 기관 요청 시 신속 삭제) 등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박상기 장관은 "오늘 논의 대상인 불법 영상물 유통은 그 자체로 중대 성범죄이고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며 "법무부는 관계부처

와 협력해 여성, 아동 등 신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장관도 "불법 촬영물은 한 인간의 존엄 파괴시키는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키고 이익을 창출하고 황제인 양 군림해온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다시 한번 관련법들이 빠르게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영민 장관은 "변형 카메라 규제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판매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하고 단속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영상물 차단기술을 이달 인터넷 방송 심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둘째부터 혜택받는 출산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확대 시행해야"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법' 대표발의

현행 둘째부터 해당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 아이로 확대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 확대법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자를 기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서 첫째 자녀부터 자녀 1명마다 각각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 두 명을 초과하는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로 제한해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있는 것이다. 즉 1명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대상자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로 제한돼 있어 본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에 한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명시돼 있던 부분을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권성동·염동열 채용 청탁"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피의자로 1심 재판을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법정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염동열(대백·영월·정선·평창·횡성)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증언해 두 의원의 또 다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6일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결심공판에 출석해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만난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직접 명단을 받았고 권 의원의 김모 비서관도 채용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염동열 의원도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나를 만나 직접 명단을 줬고, 면접이 끝나서 채용이 어렵다고 말했는데도 합력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증거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라며 "억울한 사정을 재판 과정을 통해 잘 소명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염동열 의원도 "마치 입맛에 맞는 것이 나올 때까지 이 잡듯이 뒤져보자는 정차권 눈치보거나 권력 남용을 통한 야망 의원 죽이기 아닌가 생각한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도전과 개혁의 역사!
'전문건설인'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멈출이 없습니다.

묵묵히 건설현장을 지키며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그 역할을 다해온 전라북도의 전문건설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전문건설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김태경

www.kosca35.or.kr

구독·광고문의 288-9700